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개혁 강력 추진”

尹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등 추진 엄중한 경제상황 철저 대응해야 비상경제민생회의 등 쟁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복합위기 극복을 비롯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재차 보이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는 개혁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대 개혁)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해 복합위기를 민관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

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에 대해서도 언급

했다. 이날 국무회의장 앞에는 다누리호가 보내온 달 사진들이 전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봤겠지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호가 첫 소식을 보내왔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도 챙겨야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다누리호가 보낸 지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쏜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우주항공청이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구성될 것”이라며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국조특위 연장 ‘공감’, 증인 채택엔 ‘이전’

여야, 기간연장 등 논의 비공개 회동 국힘 주호영 “국조특위 의견 듣고 이유·기간 등 확인 후 논의 하기로”

여야 합의로 불안하게 출발했던 국회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제대로 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정쟁에만 매몰됐다고 비판받는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오는 1월 7일까지다. 국조특위는 4일과 6일 1·2차 청문회를 앞뒀다. 더군다나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국조특위는 역할을 마치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1월 임시국회 소집 건등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에 나

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법 제76조3항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기자들에게 알리며 “국조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국조특위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이유와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논의의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민주당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의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주 원내대표도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내부 설득과 상황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가족에게 말씀드렸다”면서 “실제로 예산안 논의 과정이 생각보다 길게 진행됐기 때문에, 최소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지연 때문에 늦어져 기간 연장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이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청문회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이 큰 편이고, 민주당과 유가족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제대로 된 청문회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참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겠다는 생각이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은 지난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빠졌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성일종(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성수품 최대공급, 고속도 통행료 면제 추진

설 민생안정대책 민·당·정 협의회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성수품 공급을 최대 규모로 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도 추진한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설에 필요한 성수품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류독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은 계란 방출·수급에 신경써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측에서는 설 성수품에 대한 30~50% 사이의 대폭적인 할인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전통시장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홈플러스·농협하나로유통·전국상인연합회 대표자 등은 도심지 내 화물 차량 진입 제한 완화로 성

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은 올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에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복지할인’ 등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강화, 긴급복지지원금 인상, 노숙인·결식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지원도 정부가 촘촘하게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명절 기간에 중소기업인들이 자금난으로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당의 요청도 있었다. 이와 관련 당은 명절 연휴 전 시중에 자금 공급,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연장 신청 연기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 당은 설 명절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한 4일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연휴 기간 고궁·미술관·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면서 당이 요청한 대로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내일(4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중대선거구, 거대정당 ‘나눠먹기’에 유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의 이익을 ‘나눠 먹기’ 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며 당내 여러 의견을 받아 당론을 수립할 것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최근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는 거대 정당들이 나눠 먹기 하기도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의 선거구제를 개편하자는 의제를 신년에 띄우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1인이 당선되는 단순다수 대표제



를 채택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느 제도나 문제가 많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크다는 것이 현재까지 증명된 바이다. 소선거구가 선출과정에서 1인이 대표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만 봐도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제 하에선 소선거구가 공합이 맞는 제도라는 특성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에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에선 소선거구제가 맞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